

선진적 사회정책의 미래를 위하여

1. 모든 성장은 선(善)인가?

1989. 11. 9에 발생한 베를린 장벽의 붕괴와 독일 통일 그리고 동유럽 현실사회주의의 붕괴 이후 세계는 18세기 계몽사상의 출현과 프랑스혁명 이래 초유의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는 전 세계적 차원에서 진보사관의 실종 내지는 유토피아의 상실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세계는 전 인류적, 보편적 이상을 추구하는 운동과 철학이 실종되어 있는 상태에서 낡은 국민국가적 차원에서의 산업화, 정보화와 같은 발전 전략과 이에 상응하는 지역적 혹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자주 혹은 패권을 추구하고 있다. 이는 결국 국민국가적 차원에서의 대립과 경쟁의 격화를 불러와 냉전 이후의 세계 역시 지극히 불안하고 위태로운 상태로 만들고 있다.

냉전체제하에서 한국은 개발과 발전을 위해 외자유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을 채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GNP(GDP) 규모상 세계 최하위권에서 급속한 서열 상승을 이룩하였다. 최근 GDP 규모는 세계 12~13위, 1인당 GDP는 29~30위 정도에 도달하였다.

이명박 정부는 2007년 대선 당시 이른바 '747' 을 내세워 집권 기간 내에 7% 성장, 1인당 4만 불 소득, 세계 7대 경제규모에 도달한다는 야심 찬 공약을 내세우다가, 집권 후 이는 공약이라기보다 '비전' 이라고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서 나는 '747' 의 실현 가능 여부를 논하려는 것

이 아니라 이것이 과연 국가적 혹은 공동체적 목표로 타당한 지를 묻고자 한다.

세계의 모든 주요 국가는 이제 과거와 같은 무한성장이 아니라 세계의 자연적, 사회적 환경이 허용하는 적정 성장이 어느 정도인지를 함께 고민하여야 한다. 한국은 오래전 절대빈곤의 상태를 벗어나 세계의 부자클럽에 가입하였다. 따라서 이제부터는 국민의 웰빙을 생각하는 성장과 소득의 한계를 진지하게 고민하여야 하며, 한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목표는 GNP(GDP) 올림픽의 금메달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본다.

2. 발전국가의 극복

87년 6월 항쟁 이후 20년이 넘는 시간이 흘렀고 그간 한국은 4차례에 걸친 정권 교체를 이루었다. 민주적 헌법, 제도의 정비와 아울러 탈권위주의, 정치자금의 투명화 등에서 한국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인 영역 특히 경제 운용에 있어서 민주화가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살펴볼 때에 정경분리와 같은 가시적 성과에 불구하고 본질적 변화가 눈에 띄지 않는다.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국가 이데올로기인 경제성장론이 이명박 정부의 '747' 과 같은 형태로 재등장하게 된 배후에는 솔직히 민주화 20년 동안 민주개혁세력이 새로운 국가적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함에도 기인한다. 민주화 시대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은 완전히 새로운 가치관과 비전을 전면 내세우기 보다는 내부적으로는 박정희 발전국가론과 외부적으로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의 적당한 절충적 타협을 시도하였다. 박정희 발전국가론을 극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민주화시대 정치 지도자들은 결국 박정희의 업적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고, 박정희와 비교할 때 스스로 왜소해 질 수밖에 없었다.

과거의 성장 공식은 고투자를 통한 고성장이었고 이는 자연자원과 환경 그리고 인간 노동력의 약탈적 소모를 전제로 하는 것이었다. 현재 70년대에 존재하였던 값싼 에너지, 천연자원, 식량 그리고 노동력은 존재하지 않으며 거기에 더해 민주화 이후의 변화된 국민의식과 사회관계를 고려할 때 과거의 성장론과 발전국가론은 더 이상 현실적합성을 지니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관계 그리고 보수적 식자층에서 아직도 과거 개발시대의 향수는 만만치 않으며 더구나 이는 영남보수라는 최대 정치계파의 이데올로기 구실을 하고 있어 현실 정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성장이 현재의 경제문제나 사회문제를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2007년에 공식적으로 한국사회는 '국민소득 2만 불 시대'에 진입하였다. 국민소득 2만 불은 국민

성원 전체에 만약 평균적으로 배분되었다고 가정 한다면 성원 전체에게 어느 정도 품위 있는 생활을 보장하기에 충분한 액수다. 세계 대부분의 국가, 절대 다수의 성원은 이 기준에 턱 없이 못 미친 상태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이는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즉 국민소득 2만 불이 적절히 분배될 수만 있다면 저성장 기조 하에서도 대부분의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적절한 사회정책과 재분배정책이 수반되지 않으면 2만 불 혹은 그 이상의 수준에서도 사회경제문제의 해결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이미 역사적 경험이 보여준다. 설령 국민소득 4만 불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이 사회적 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사회성원의 상당수는 상대적, 절대적 빈곤상태에 놓이게 되고 분배를 위한 사회적 갈등과 분규는 위험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결국 소수 부유층은 필리핀이나 브라질 그리고 비버리 힐스에서 이미 나타나는 바와 같이 사적으로 무장한 특수지역에 고립되고 담장 너머에는 다수의 빈민이 서성대는 그림이 나타날 수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부국이라고 하지만 미국 대도시의 빈곤과 심각한 사회문제의 존재, 미군 전체 병력보다 더 많은 미국 시민이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풍요가 사회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이미 19세기 산업혁명 초창기에 영국은 세계 최고의 부국이었지만 영국의 노동자 계급과 도시빈민의 상태는 최악의 상태에 있었음을 당대의 사가들이 증언한 바 있다.

민주화 20년에 경제사회적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으며 이는 특히 외환위기 발생 이후 10년을 담당한 김대중, 노무현 정권에게 심각한 정치, 사회적 과제가 되었다. 과거의 발전국가를 극복하는 개혁 의제 설정, 내용, 방법에 있어서 많은 논란과 반성이 가능한데 결과적으로 발전국가 이후의 새로운 국가, 사회의 모습을 만들어 내는 데 단지 제한된 성과만을 거두었다.

민주화 세력이 개발독재 및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어정쩡한 절충을 취하다 실패하였다면 뉴라이트(신우익 혹은 신보수)와 2008년의 보수정권은 이들과의 보다 완성도가 높은 재결합을 피하고 있다. 한국의 보수세력이 새로운 보수의 이념이나 가치를 제시하지 못하고 과거로 퇴행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들에게 독일의 기민당이 '사회적 시장경제'를 주창한 것과 같은 개혁성과 능력, 의지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제 한국의 보수 역시 그들 말대로 새로 태어난 보수(뉴 라이트)라면 '747' 식 성장이나 '한반도 대운하' 식 개발 만능주의의 집착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수라 하더라도 독일이나 스웨덴 식의 보수를 따라 국민 삶의 문제를 기초로 하는 복지사회의 이념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검토한다면 한국의 보수와 진보진영과의 정치적 간극은 훨씬 좁혀질 것으로 여겨진다. 이제 보수 역시 민주화 이후의 세계와 국내적 환경에 걸맞는 즉 발전국가를 극복한 정치, 사회, 경제의 틀을 제시하는 것이 정책수준과 정치문화의 발전을 가져오는 길이라고 여겨진다.

3. 국민국가를 넘어서 지구적 상생의 길로

성장론은 아직도 한국사회에서 만만치 않은 위력을 지니고 있다. 한국인은 세계은행을 위시한 국제경제기구가 발표하는 GNP(GDP), 1인당 국민소득, 성장률의 순위에 때로는 안도하고 때로는 크게 우려한다. 이는 한국의 학부모나 학생이 내신과 수능 성적에 전전긍긍하는 것과 유사한 심리와 논리라고 할 수 있다. 돈과 성적 즉 우수성은 이 시대에 바로 지배력 곧 권력으로 연결된다. 경제적 부국은 빈국을 지배하여, 과학 기술력이 우월한 국가는 열등한 국가를 지배하며, 성적이 우수한 자는 처지는 자를 지배한다.

경제성장, 과학기술개발, 학습능력이 타인에 대한 우월한 지위 곧 지배력을 획득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를 추구하는 행위는 결코 고상하거나 윤리적이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민주화 시대를 포함한 지난 60년 간 한국 사회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를 추구하여 왔다. 세계에 자랑하는 한국의 교육열, 한국 학생들의 학력과 경쟁력은 잔인한 경쟁과 차별 시스템 속에서 형성되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1등주의'는 한국 기업의 공격적 해외 진출에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나 이는 세계 도처에서 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제 한국은 세계를 진출과 지배의 대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선한 이웃으로서 공생과 상생의 관계를 모색해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 이는 특히 한국 내의 외국인 정책에서 심각히 고려할 사항이다.

또한 현재 한국 사회에 팽배하는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높은 소득, 좋은 배우자라는 중산 계급적 가치관에는 평화, 생태, 사회적 배려와 같은 선진성의 징표는 어디에도 없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은 경쟁주의, 이기주의, 물질주의와 같은 개발시대의 후진성이다.

“경제를 다시 살리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공약 역시 이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선진성과는 거리가 멀다, 진정한 선진성은 사회적으로 계급, 계층간의 공존과 사회적 격차의 축소, 대외적으로 타 국가, 타 경제와의 역시 공존과 상생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다. 이제 한국은 협애한 국가 이기주의를 넘어 이웃과 세계에 대한 이해의 수준을 높여야 한다.

4. 공공성의 강화와 교육

현재 절대적 권위를 지니고 유통되고 있는 시장원리와 경쟁력 담론은 사회적 격차의 유지와 확대를 통해서 이른바 생산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서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노동자와 학생 상호간의 차별적 보상에 의한 경쟁이 과연 얼마나 생산성과 학습효과를 진작시키는 지

는 불확실하나 이것이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조장하는 것은 확실하다. 한국의 교실이 살인적 경쟁 속에서 피폐해 가는 와중에 중산계급은 해외유학에서, 하층계급은 일탈행위에서 탈출구를 찾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다. 경쟁을 통한 지위와 자원의 배분은 공정한 것이라는 얘기는 아주 공허하고 무책임하다.

교육에서 부모의 출신 배경과 경제력은 아동의 학습 성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더구나 사교육의 무한 경쟁이 존재하는 속에서 경제적 약자가 불리할 것은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내신이건 입시건 간에 추천 방식이 아닌 한 경쟁에 의한 학생 선발은 사실상 불공정 경쟁과 사회적 차별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제도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이동의 통로가 되지 못하고 고착화된 신분, 계급의 재생산 기제로서 작동하고 있다. 더구나 이제 영어가 주요한 사회적 신분의 징표가 되고 외국학력(주로 미국의 명문대학)이 학벌의 주요 요소로 추가되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절대적은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감내할 만한 기회의 균등을 이루기 위하여서는 공교육의 질을 최대한 향상시키기 위한 대규모 공공투자가 교육부문에 이루어지고 취약계층에 대한 차별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공교육의 강화는 학생 개개인의 숨은 자질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궁극적으로 전체 사회의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현재 고비용의 사교육을 전제하는 예능 부문의 경우 얼마나 많은 귀중한 재주와 자질이 발견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것을 볼 때 '국가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라도 공교육의 강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5. 지속가능한 생산과 복지를 위하여

미래 사회정책의 설계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전제에서 설계되어야 한다. 과거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의 복지시스템은 고도성장과 이에 수반한 완전 고용, 지속적인 소득의 확대, 세수의 확대를 전제로 해 왔다. 다시 이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팽창하며, 자원과 에너지가 무한하며 환경, 생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 것이었다. 시장은 지속적으로 팽창할 수도 있으나 중국, 인도 등 신규 참여자로 인하여 경쟁은 더욱 치열하여졌으며 자원, 식량, 환경 자원은 이제 공급의 한계에 이르렀다. 만성적 고실업, 복지 지출의 증대, 재정적자의 확대 속에서 복지국가의 위기론이 요란하며 여기에서 많은 국가들은 다시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성장에서 그 해답을 찾고 있다.

그러나 국제경쟁력이란 상대적 개념으로서 모든 국가가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통해 성장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원, 에너지의 고갈과 특히 지구 온난화 현상 같은 인류역사상 초유의 사건 하에서

지금은 성장이 아니라 과연 현재의 생활, 소비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세계는 이에 대한 대응책이 막연한 채로 닥쳐오는 재난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가 미덕이 되는 사회”라는 말은 어느 교과서에서도 이제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현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는 아직도 소비가 미덕인 과거의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침 증권 방송은 여전히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와 소비심리가 늘어나고 있느냐로부터 시작한다. 소비가 늘면 생산이 늘고, 실업이 줄며 다시 소비가 증대한다는 도식이다. 그러나 (석유)소비가 늘면 유가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면 소비가 감소하는 도식은 또 어찌할 것인가. 무한한 소비의 팽창으로만 유지할 수 있는 경제체제는 결국 파국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향후의 지구생명체는 절제된 소비와 환경관리 속에서만 생존할 수 있으며 이는 사회보장과 사회복지체제의 유지에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지구촌 공동체는 지구적 차원에서의 자원, 에너지, 환경관리에 관한 거버넌스를 만들어야 하며 한국은 이에 기꺼이 참여하여야 한다. 과학, 기술은 희소한 자원과 제한된 환경·생태적 조건 속에서 평화롭고 인간다운 삶을 전 인류가 같이 누릴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위한 정치, 사회적 조건을 창출해 내는 일이다.

지구적으로는 이른바 선진국, 부국이 소비의 통제(특히 미국에서), 자원의 지구적 배분으로 즉 특권의 자발적 포기과 전 지구적 나눔을 통해 전 지구적 공생의 방도를 모색하여야 한다. 국내적으로도 역시 가진 자들을 중심으로 사회공헌과 고율의 조세부담을 스스로 감수하고 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하여 사회계급, 계층이 공생과 상생의 길을 모색하는 정치, 사회적 제도를 구상하여야 한다. 자원이 희소하고 환경이 붕괴하는 상황은 새로운 전체주의가 탄생할 수 있는 이상적 조건이다. 이 조건 속에서 사회성원 모두가 품위 있는 일자리를 누릴 수 있는 완전고용을 이룩하고 각종 사회적 위협으로부터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과제이다.

그러나 이 과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할 때에 아마도 우리는 미래의 전체주의 사회를 맞이할 것이니 아직 시간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 미래의 대 파국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다.

6. 민주주의의 미래

국제적 차원에서나 국내적 차원에서나 현재와 같은 시장의 무한경쟁은 결국 모두의 파국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세계자본주의는 이제 지구적 차원에서의 통제와 관리체제를 구축하지 못하는 아마도 파국의 길로 내달을 것이다. 국내적으로 현재와 같이 양극화를 심화시키며 근로자와 하층계급의 생존을 압박하는 시스템과 자유민주주의는 병존이 불가능하다. 한국의 보수정권은 사회정책적 철학이나

고려 없이 국제경쟁력 강화에 의한 성장 담론으로 미래를 맞이하려 하나 '747' 이나 '한반도 대운화'가 이미 실현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는 아무런 미래의 대비책이 되지 못하며, 한국사회는 이제 위험한 상황에 접어들었다.

한국사회는 이제 사회성원 모두의 존재와 이해관계를 배려하는 사회정책의 설계와 집행에 의해 사회통합, 국민통합을 이루어 미래의 도전에 대응하여야 한다. 이는 소유와 능력이 타자를 지배하는 상태를 지양하고 모두가 삶의 기회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사회적 윤리성을 실현하는 상태를 이루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구적 차원에서 지구생명체의 공생과 공존이 가능한 거버넌스를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한다.

이제 미래의 민주주의는 문명성과 윤리성을 토대로 하여야만 유지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서는 이를 기치로 하여 국민적·사회적 세력을 규합할 수 있는 정치세력이 형성되어야 하며 이것이 현재의 한국 민주주의가 직면하고 있는 최대의 과제이다.